

통권 제41호(2003년 8월) 주요 목차

책을 열며 / 두 여중생 투쟁 1년의 의미와 민족자주운동의 과제 / 홍근수

특집 / 한미동맹 50년 무엇이 문제인가 \_ 리영희 선생 인터뷰, 대담: 홍근수, 박기학 / 정리:유홍, 김현진

특집 /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_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대전제 / 강정구

특집 / 전시작전권 환수와 수직적 한미연합지휘체계의 해체 / 정세진

평통사재창립 / 평통사 재창립의 의의와 과제 / 임종철

평통사재창립 /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 힘쓸 터 / 서영석

평통사재창립 / 평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영광 / 윤인중

평통사재창립 / 평화와 통일의 길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 신정길

평통사재창립 / 샬롬! / 이세우

평통사재창립 / 생명 죽임'의 분단 현실을 뚫고 나가야 / 정경호

평통사재창립 / 평통사 재창립에 대한 소회와 결의 / 김홍수

평통사재창립 / 재창립 대회가 꼭 흥겨운 축제 같아 / 김슬기

평통사재창립 / 자주, 평화, 통일로의 새로운 도약 / 이제학

평통사재창립 / 출범선언문, 축하

평화단체 탐방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찾아서 / 김은아

평화카페 / 매번 용두사미로 끝난 군대 개혁의 목소리\_평화북 리뷰(표명렬,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 유홍

## 두 여중생 투쟁 1년의 의미와 민족자주운동의 과제

상임대표 홍근수

고 신효순·심미선, 꽃다운 나이의 우리 딸들이 미군 궤도 차량에 깔려 참혹하게 죽은 지 꼭 일년이 되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시청 앞에서는 4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 날 추모 행사는 서울 이외에도 전국 각지와 해외 등 100여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날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결코 꺼질 수 없는 자주와 평화의 염원을 밝힌 것이었다.

미군의 온갖 범죄와 횡포 등에 대하여 잠자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국민이 일제히 분노하여 일어섰고 거리로 나와서 손에 손에 평화와 민족자주의 촛불을 들었다. 이 날 평화 행진에 나온 미국의 반전평화주의자인 사코 세피아니는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한국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이며 불평등한 재판”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미국에서 똑같은 사건이 외국 군인에 의해 발생했다면 미국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의 폭발, 이것이 지난해 12월 14일, 12월 31일, 또 1주기가 되는 올해 6월 13일의 평화와 민족자주를 위한 촛불 바다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정부 당국을 믿지 못하게 된 한국민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미국으로부터 민족자주를 찾고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민족자주와 평화 실현을 자신의 직접적인 과제로 하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이 1년에 걸친 여중생 투쟁이 가져다 준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멀리는 광주민중항쟁 이후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선도적 반미자주화 투쟁이 밑거름이 되었고, 가까이는 2000년 이후 줄기차게 벌어진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불평등한 SOFA 개정 투쟁, MD 저지 투쟁, F-15K 도입 반대 운동 등 대중적 민족자주 투쟁이 여중생 투쟁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중생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기만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미국은 살인 미군 한국 법정 처벌,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 사과 등의 요구를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른바 ‘북핵’ 문제를 빌미로 북에 대한 봉쇄와 선제공격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엄청난 비극이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 위협이 한국민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한국 문제에 일가견이 있는 브루스 커밍스는 “북과의 전쟁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국내 언론 매체인 MBC는 전쟁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다. 한국인만이 아니다. 부시 탄핵을 말한 바 있는 프랜시스 보일은 “부시는 대선에서 그의 인기 하락과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할지 모른다”고 전망하였다. 한국인에게 널

리 알려져 있는 셀리그 해리슨은 “대북 경제제재는 미국 대선까지 계속될 것”이고 “만일 부시가 재선되면 그 후인 2005년 4월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이라는 회의를 통하여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한미연합 전력을 증강하며, 한미 간 군사 임무를 전환한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500만 평의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측이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제공 없는 전면 반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에 향후 4년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전력 투자를 하겠다면서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은 대북 방위 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은 동북아 세력균형자 임무를 맡는다는 계획 아래 관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책임 등 10개의 특정 임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계획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자국의 신군사 전략 관철을 통하여 북에 대한 봉쇄와 선제공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장기적 한국 주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더욱 확고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중생 범대위의 경험을 살려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더욱 완강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민족자주평화투쟁에 함께해온 시민사회운동 대오가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주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한반도 전쟁을 저지시켜 미국의 한반도 영구 지배 음모를 물리치고 민족자주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여중생 사건의 진실,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미군들의 범죄와 횡포를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두 여중생의 한을 푸는 일과 한반도 전쟁 예방이 다르지 않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국내 여론과 국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일이다.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하며,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는 것은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을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 한미동맹 50년 무엇이 문제인가?

-리영희 선생 인터뷰-

한미동맹이 맺어진 지 어언 50주년.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이라는 이름 아래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더욱 고착·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을 짜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관계의 최고 전문가이신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한미동맹을 규정하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새로운 한미동맹의 틀로써 제시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국방부가 말하는 '자주 국방'의 본질, 북한 핵문제의 본질, 대미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주제가 방대하여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에서 명백히 드러난 대미 관계의 예측적 실상의 뿌리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과 이를 개폐해야 할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인식과 실천 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편집자주

날 짜 : 2003년 7월 7일(1차 인터뷰), 7월 15일(2차 인터뷰)

장 소 : 경기도 산본 리영희 선생님 자택

대담자 : 홍근수 상임대표, 박기학 정책실장

정 리 : 유홍·김현진

홍근수 목사(이하 홍 목사)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평통사 회지 독자들에게 근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리 선생 : 한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00년 11월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 오른쪽 전체에 마비가 왔던 건데, 다행히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절룩거리지만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닐 만하고 지팡이 안 짚고도 다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팔, 손, 손가락 끝까지 마비가 안 풀렸다는 것인데, 글을 쓴다든가 단추를 채운다든가 이러한 미세한 동작을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지금과 같이 장마철엔 특히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소위 '중풍 환자'로서는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좋은 상태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에게 감사하겠지만.....하여간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홍 목사 : 참 다행입니다. 빨리 쾌유되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이 리 선생님이 혼자서 하시던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리 선생 : 아주 흐뭇하죠. 한때 정말 외로이 군사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막한 시대에 비하면 후배 후학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든든하지요.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열세이지만 과거에 아예 제로에서 싸우던 때를 생각하면 큰 차이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이 먼 길 홍 목사님께서 오셨지만 군사적인 문제를 포함한 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하여 후학들의 훌륭한 영도를 목격하고 있는 거죠, 저로서는 참 수고 많이 하세요. 제가 오히려 감동합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다

홍 목사 : 먼저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보다 큰 틀인 미국

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구도 속에서 움직여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 선생 : 미국의 동북아 전략 가운데 특히 군사적 측면을 말한다면 세 가지로 나눠 봐야겠  
죠. 첫째로 전세계적 규모의 전략 개념에서는 옛 소련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권  
이 해체된 이후의 21세기를 통해서 아마도 과거 소련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  
는 중국의 국력 증강과 전 아시아적 영향력을 모든 수단을 다 하여 억제, 봉쇄하는 것입니  
다. 둘째는 일본으로 하여금 대중국 장기 전략의 미국 대리인 역할을 수행케 하는 지역 구  
상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전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구 일본제국이 패전, 패망한 뒤에  
아시아 전체 지역의 지도 국가(leading nation)로 중국의 장개석 정부와 중화민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상과 희망과는 반대로 중국 대륙에서 친미 자본주의적 장개석  
중화민국 정권이 패망하고 모택동 중국공산당 정권이 집권함으로써 미국은 전쟁 후의 중국  
의 역할을 단념하고 바로 2, 3년 전까지 전쟁 상대였던 적국인 일본에게 아시아의 지도 역  
할을 위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국인 소련과 중국을 배제하고 사실상 독점적인  
대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미국 단독의 일본 대국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강화와 특히 대북한 전쟁 목적을 위해서 일본의 평화  
헌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화함과 동시에 급속한 군사대국화 계획으로 막강한 일본 군사력을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 전략과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중국의 대국화를 방해 및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과 전략이 있습니  
다. 첫째는 대만 문제입니다. 미국은 1972년의 중·미 국교 정상화 협정에서 대만을 중국 본  
토의 영토로 규정하고 대만 주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으며 당시의 대만 장개석 국민당  
정권의 대륙 무력 수복 계획을 단념시키고, 또 대륙 수복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네 가지 기본 문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은 그 협약 이행 의무를 흐  
지부지 회피하는 쪽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또 대만의 독립국가화 운동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화당 정권을 구성하는 수구 냉전, 자본, 군수 세력과 유대인 세력이 지배하는 미국 언론  
과 금융계, 그리고 과거의 대소련 반공 냉전 세력이었던 기독교 원리주의 세력들이 지난 20  
여 년 동안 꾸준히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예상되는 중국  
의 대국화와 그 아시아적 영향력을 봉쇄하는 지극히 효과적인 전략이죠.

둘째는 중국의 소수민족에 작용하여 중국 내부의 끊임없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54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회교 민족은 인구학적으로 봤  
을 때 5천만~6천만에 이르는 큰 세력입니다. 그들의 이슬람 종교로 인한 중국 내부의 갈등  
과 혼란은 상시적으로 존재합니다. 티베트도 이런 목적과 전략에서 미국의 초점입니다. 가  
령 미국의 반중국 세력이나 학자, 지식인, 종교 세력이 티베트 문제를 오로지 종교 분쟁 또  
는 인권 문제처럼 포장해서 세계에 내놓는 데는 그와 같은 장기적 목표와 정치적 의도도 강  
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는 동남아시아의 20여 개에 이르는 작은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는 정책입  
니다. 아세안을 비롯해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적 노력에 미국이 금융·경제·정  
치·문화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과 군사협  
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강대해질 중국에 대한  
군사적 측면의 미국 전략입니다.

넷째, 세계적 경제 군사 국가인 일본과 남한을 대중국 포위·억제를 위한 장기 전략에 편입  
하고, 필요하다면 21세기를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태세로 끌고 가려는 전략은 우리가 다 아  
는 바입니다.

홍 목사 : 부시 정권 들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리 선생 : 부시 정권 들어서 변화는 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 이전 정권이 취해 왔던 전략을 보다 촉진하고 강화하는 양적 변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선 대만 관계를 보면 클린턴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독립 군사화를 원조한다는 의심을 받는 행위를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 들어와서는 중국 본토의 비판이나 반대를 거의 개의치 않는 대담한 발언이나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정권에 와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대만에 게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정밀 현대식 무기들을 대폭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중국 공군이 소유하는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세한 미국의 현대적 전투기와 유도미사일과 해군 이지스함 등의 공급을 들 수가 있겠죠.

홍 목사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리 선생 : 지금 중국이 한반도의 군사 위기 상황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의도에 대해서 ‘중재자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약점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국가 발전 및 안보 계획에서 미국의 방해와 위협을 어떻게든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요구 조건 교환으로 미국에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력이나 국가의 크기에 비해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력은 훨씬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의 문제에서 계속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속셈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들이 북한의 유일한 군사적·전략적 보호국이니 북한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폐기하든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굴복하게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만 문제, 중국의 올림픽 개최 문제, OECD 가입 문제 등 여러 가지 중국이 원하고 있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IMF 등 세계 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중국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환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 관계의 얽힘이 한반도 문제와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묘하게 중국이 관련되면서 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정책

홍 목사 : 일본에서는 지난 6월 6일 국회에서 유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리 선생 : 일본의 최근 입법 문제는 일본의 완전한 군사대국화를 급속도로 지향하는 것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일본 패망 이후에 소위 세계 헌법사상 초유의 일로서 국가의 전쟁권과 군사력을 포기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니까……. 이걸 바로 1945년 전의 군사적 패권주의 내지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지위의 확고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아주 겁나는 거죠. 일본 군사대국화는 물론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나 제도에 따라 무(武)를 숭상하는 일본 국민의 독특한 정치 형태도 있고 문화도 그렇지만,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본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압도적 다수가 군사대국화에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소수의 우익, 더욱이 극우, 반공, 냉전주의적 세력과 개인, 그리고 패망 전에 일본 군국주의의 주역을 맡았던 인간들이 일본 정치를 장악하면서 옛 일본으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포함한 모든 제도의 개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하지만 그렇게 이뤄져 왔고, 최근 5~6년 사이에 급속도로 군사대국화되었어요. 그것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의사이기보다 미국의 일관된 정책 때문이에요. 만약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원치 않았다면 일본이 것처럼 무모할 정도로 모험주의적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을 만큼 비자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노선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동아시아 장기 전략의 결과예요. 미국이 요구하고 압력을 가해서 평화헌법 체제를 야금야금, 일본말로 ‘공동화’한다고 하는데, 껌질만 남겨 놓고 실체는 다 빼버리는 그런 과정이 지난 20~30년간 꾸준히 계속되어 오다가 최근 5~6년 사이에 마무리 작업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만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과 그 책임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썩먹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 목사 : 일본은 벌써 오래 전부터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들을 취해왔는데 이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죠?

리 선생 : 1960년대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1978년에 미국이 일본을 동북아시아의 군사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른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시점으로 하여 1993, 1994년에는 그동안 일본 군사력 행동의 범위를 주로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 본토 주변 군사 공격에 대한 대응에 한정했던 것을 확대하여 미국의 대북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 공간에서 미국 군사행동에 협력하는 이른바 ‘주변사태’로 더욱 강화시켰어요. 1999년 5월에는 일본 군대의 본격적인 아시아 전체 지역 활동을 합법화하는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와 같이 ‘평화헌법’을 유명무실화하는 일련의 미·일 공동조치에 따라서 일본 군대는 1991년 캄보디아 파병을 시작으로 동티모르 파병과 그 밖에 세계 많은 지역에 파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자위대’라는 일본 군대는 ‘방위’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미국과의 공조로 전지구적인 파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미국과의 군사적 합동작전 체제를 강화하는 최종 단계로 2003년 6월 소위 한반도에 대한 선제 군사행동까지를 전제로 하는 ‘무력공격사태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본격적이고 강대한 군사력을 갖춘 일본과 ‘상호협력계획’ 및 ‘공동작전계획’을 세워 대북한 무력 공격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첨단 전력 위주의 전쟁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것

홍 목사 :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리 선생 : 미군의 배치 이동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1991년에 있었던 1차 이라크 전쟁부터 미국은 초현대 무기, 전자공학화된 무기, 모든 자동화된 무기, 정밀화된 무기로 인간적 요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 구상을 실행했던 말예요. 그 구상이 이번 2차 이라크 전쟁에서 아주 완벽하게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는 전쟁 기간에 사용된 인간의 병력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쪽 인적 피해

라는 것은 118명인가, 하여간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데 10단위, 100단위 이하의 인명 피해로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 무기학적으로 아주 혁명적인 현대화 때문에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미국은 오히려 전세계에 미군을 배치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프간을 새롭게 자신의 패권주의 하에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또 미국은 과거에 공산권이었던 18개 동유럽 국가들, 가령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 등 이런 국가들을 이라크 전쟁에 동원했던 말이에요. 이번에 그들이 미국에 완전히 밀착했거든요. 따라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 중간 지대에 하나의 넓은 띠, 아마 500~600km에 이르는 폭의, 그러면서 한 2000km에 이르는 길이로 아프가니스탄 바다 이쪽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 미군 장악 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군이 재배치해야 할 군사 병력이 당연히 어딘가에서 이동해야 되겠죠.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군사 병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남한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군이 더 강력한 세계 지배를 위해서 혁명적인 무기학적 변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적인 이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 때부터 남북간 군사 대치 구조의 기본 개념이 다량의 무기와 많은 병력이 필요한 양적인 군대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무기학적 변화의 결과로 해서 한반도에서도 양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력을 줄이거나 배치를 변경함으로써 그전보다 오히려 몇 배 더 전력이 강화되었어요. 병력을 5천 명, 8천 명 줄인다고 해서 미군의 전쟁 능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셋째로 얘기해야 할 것은 그동안 소위 말하는 ‘인계 전략’이라는 것이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이 있을 때는 미군이 공격 대상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반드시 보복을 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개입할 것이므로 남한 보호를 위해서는 미군이 서울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남한 국민이 미국의 북한 공격 전쟁 전략의 불모가 되었어요. 잘 들어 보셔야 돼요. 그전에 인계 전략이니 한 것은 미군이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미군이 불모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전략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식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지난 4월인가요 노 대통령이 미국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면 안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북한이 공격을 못한다!”, 즉 미국 군대를 북한의 군사 공격에 대한 불모로 잡아놓음으로 해서 남한의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구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전략이 거꾸로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군사력의 성격 자체가 재래적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한강 북쪽 서울 부근에 있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평택으로 내려간다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나 전쟁 능력은 그전보다 강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보태서 미군이 평택 이남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이 걱정했던 휴전선 바로 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6천 문의 자주포, 로켓포와 장거리포의 사거리 밖으로 미군을 빼는 것이에요. 미국 군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남한 군사 무기인 장거리포의 사정 밖으로 빠짐으로 해서 안전한 지역에 놔두고 거기서 새로운 전략 군대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전쟁 능력을 확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의 장거리포나 로켓포라는 것이 남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됨



으로 해서 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남한 국민의 재산과 모든 것이 지금 볼모로 잡혔다 이거예요. 아주 절묘한 전략 구상이죠. 북한으로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으로서도 미국 군대의 대북한 군사전략·공격전쟁을 관리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미군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우리만 당하는 꼴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주한미군 2사단 배치 전환 문제에 관해서 발표한 북한의 공식 발표는 아주 그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군의 평택 이남 전속 배치는 남한을 희생으로 내보낼 그런 위험한 수법이다. 그리고 미군의 위험한 행동은 앞으로 결국 남한이 그 피해를 대신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110억 달러어치 최신 무기를 갖다 놓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사용했던 군사력, 무력이 바로 이리로 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에 상응하는 첨단 무기를 사라. 그럼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되겠죠.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 군대가 지휘하고 그 집행 능력 체계 속에 들어가는 군사력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최신형 아파치 헬기 등을 들여오고 남한이 그만큼 사면 북에서 보면 지금까지 없던 분량만큼의 군사력이 남쪽에 배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위험 수준을 높여 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국방부가 말하는 ‘자주 국방’이란 한국군과 한국 돈으로 미국의 대북 전쟁을 치르자는 것

홍 목사 : 최근 국방부가 ‘자주 국방’을 내세우면서 전력 증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리 선생 : 난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라는 것을 개념화할 자격이 있나부터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 특히 군사 관계에서 완전히 예속된 국가이거든요. 내가 어딘가에도 썼지만 대한민국의 처지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보호조약에 의해 일본의 보호국이 됨으로써 주권이 박탈된, 즉 외교권·정치권·군사권이 없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가령 우리 한국 사람들, 지식인들까지도 구축함 4500톤 짜리를 사왔다는가 이지스함을 사오게 된다는가 F-16 전투기를 160대 보유하게 된다는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다는가, 또 한반도에서 가령 전쟁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군대 운용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에이웍스라는 공중정보수집기-태평양이나 상당한 거리에서 필요한 것입니다-라든가 장거리 작전에 필요한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 급유기 같은 것들을 사오게 된다고 해서 막강한 군사대국이 됐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의 실체를 전혀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죠.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완전히 묶여 있고 작전지휘권이 완전히 미국한테 가 있어요. 또 지휘 계통이나 지휘 구조가 전투 군사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자동적으로 미군사령관에게 귀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사오는 무기는 전쟁을 가상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사용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선 이미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 군대에 완벽하게 편입되어 버립니다. 한국의 혈세와 돈으로 사서 마치 우리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돼버리는 거지요. 미국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 혈세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만들어지는 군대거든요. 이 실체를 한국 사람들은 상당한 양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자주 국방의 실상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에게 자주 국방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예요. 자주 국방을 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하고 어떤 전쟁 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닐 테고 러시아하고도 아닐 테고 일본하고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해서 자주 국방인데 미국이 원하는 북한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무기를 막강하게 소유하고 그것에 돈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의 북한과의 전쟁 경우이거든요. 한국군은 하수 용병의 형식으로 미국 군대에 편입돼서 대북한 전쟁에 동원되는 것이지요.

베트남 전쟁이 일단 끝난 뒤인 1973, 1974년경 미국의 전략은 북한에 대해서 제2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었어요. 제2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당시 소련이나 중공의 군사적 역량이 베트남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전선, 베트남 전선과는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는 전쟁을 상정한 거죠. 그때 구체적인 전략이 나왔어요. 전쟁 자체는 한국군이 하고 미국은 핵무기로 엄호한다. 지금 자주 국방이란 미명하에 보유하게 된 국방력은 실제로 미국의 대북한 전쟁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사와야 할, 자기들의 돈으로 사오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유해야 할 군사력을 한국군에게, 한국 국민에게 떠넘긴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의 인식 없이 한국의 자주 국방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언어의 마취, 유희이지요.

북핵 문제의 배경은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홍 목사 : 북핵 문제로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데, 북한 핵 문제가 터져 나온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리 선생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 30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전략과 기본 구상을 볼 때 최종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니까 결국 북한이 스스로 방위하기 위해서, 핵 선제공격에 대비한 자위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핵에 대한 동기를 미국이 북한에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정세 변화의 역사적인 추이를 알아야 합니다. 휴전협정 제2조 제13항 ㄱ목에는 “북한이나 미군이나 휴전 당시에 소유했던 그런 질의, 그런 유형의 무기가 아닌 무기를 들여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핵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쌍방이 핵무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956년에 미국 합참의장 레드포드가 한국에 신무기를 도입했다고 발표해요.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이 거기에 방해가 되니까 1957년 5월 22일 “휴전협정 제2조 13항을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지요. 이처럼 미국은 휴전이 된 지 4년밖에 안 지나 핵무기를 들여왔어요. 엄청난 휴전협정 위반이죠. 휴전협정을 다 깬 거나 다름없는 범죄적이고 무모한 짓을 한 거죠.

더욱이 그 후에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반했어요. 이 조약이 체결된 때부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5대 국가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기 위해 배치했거든요. 이는 휴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그 뒤로도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아 왔어요.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북대서양동맹 국가 안에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해 요인이 없다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상황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 주로 미국 대통령이지만, 승인도 아니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대서양동맹 국가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15개 회원국끼리 핵 협의회의라는 것을 구

성해 가지고 수시로 과거 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핵전쟁 전략에 대해서 미국과 상의를 했어요. 적어도 미국이 그 정도로 상대방 동맹 국가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또 그 15개 국가 가운데 5개 국가가 핵 협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핵무기 목표 설정, 핵무기 이동, 핵무기의 교체 또는 핵무기 사용, 발사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동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설위원회거든요. 이 5개국 위원회가 15개국 유럽 국가들을 대리해서 핵 전략의 발언권을 행사하는 건데, 물론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심지어 그 다섯 국가 가운데 하나인 서독은 그때 “서독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동독을 목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게 제시해서 미국이 응했어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줄곧 핵전쟁 위협을 받아와

이 정도로 자주성이 있는 나토 국가들과 달리,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제발 핵무기를 써달라는 꼴이었으니…….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시적으로 미국의 핵전쟁 위협 하에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 핵무기로만 의존하는 자기 방어 수단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거지요. 그런데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까닭은 1990년까지는 소련과의 군사동맹으로 해서 소련이 북한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었던 말예요. 남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런데 1990년 고르바초프가 남한과 수교하면서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실질적으로 백지화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세바르트나제 소련 외상이 그렇게 통고하니까 북한 외상이 격노하면서 북한도 그럼 자위책을 강구하겠다, 모든 무기의 자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 다소 협박적인 톤이지만 그런 결의를 표명하거든요. 그래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핵무기 생산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느끼고 핵무기개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적어도 1994년 10월 클린턴 정부와 핵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았으므로 그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지요. 그 뒤 일단은 핵을 실용화할 필요성을 다급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부시에 이르러서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나오니까 아마 그때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행동으로 들어갔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도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생산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데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상당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 전력을 보유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뭔가를 자꾸 띄우는 것은 미국의 일부 강경 보수주의자들이죠.

예측 불허의 한반도 전쟁 위기

홍 목사 :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리 선생 : 지금 승리를 자신하고 있으니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선거 후에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내부의 필요성으로서 나는 선거 전의 가능성에다 좀 더 무게를 둡니다만. 역시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무겁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국가적 체면과 이익에 타격을 주면서까지 북한에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북한을 바로 이라크처럼 만들어 버리는 건데,

중국에 대한 전략적이고 범세계적인 판단을 미국으로선 안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차원을 조금 낮춰서 생각하면 지금 북한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은 중국밖에 없질 않습니까? 이미 소련과는 해체되었고 통상적인 우호조약으로 대체되었어요.

하지만 1961년 7월에 체결된 중국과의 군사동맹은 지금도 존속한단 말예요.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행위가 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맹의 의무를 짐으로 해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 상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국의 북한 파멸을 이라크처럼 그냥 방치할 것인가, 눈앞에서 자기 국경 바로 접경 지대에서 일어나는 이 중대한 사태 변화를 묵과할 것인가. 중국에선 아주 국가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정치적·군사적인 상황을 다 조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미적미적하고, 또 온건파와 강경파가 대립해 있다는 식으로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미국이 장기적인 정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러시아는 거의 도외시키고 있다시피 합니다. 어차피 한국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이유도 없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러시아는 외교적 배후 세력이 됐지만 중국은 다르단 말예요. 중국의 이익과 의사를 꺾으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미국이 결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고 막강한 최신 무기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국가 목표인 대만 수복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무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력도 굉장히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의 현 위상과 잠재적인 역량, 그리고 20~30년 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역관계를 전제로 할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쟁 행위를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서 모스크바로 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뻔질나게 북경은 가거든요. 북경이 딱 버티고 있으면 또 UN 성명 발표 같은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후퇴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미묘한 가능성의 균형에 한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조금만 허약하게 나오면 미국은 그냥 전쟁으로 나갈 기회를 포착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중국을 이 문제의 주요 요소로 상정할 때 미국이라도 선불리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금년 가을부터 내년 여름까지가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필요없는 조건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야

박기학 실장(박 실장) : 지난 번 1차 인터뷰 때는 주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실상과 그 정책적 배경에 관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고쳐 나가는 데서 요구되는 실천적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쭙 보고 싶습니다. 저희 평통사나 자통협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 하위 협정들의 개폐 없이는 대등하고 자주적인 한미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제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내용을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 선생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국내에 있습니까?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전체 국민들 속에 차지하는 인구적 비율이 또는 여론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 실장 :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미 SOFA는 불평등하다는 것은 대강 알거든요.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 요구 이전에 내용 자체도 잘 모른다고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 선생 :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는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인지, 어떤 단체나 어느 정도의 인구인지…… 뭔가는 있을 게 아니겠어요?

박 실장 : 한미 SOFA나 두 여중생 문제가 생기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주권, 영토주권, 정치주권을 송두리째 내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고 보고 그걸 제기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알려 나간다면, 지금 한미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올해 2월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언급처럼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적 요구,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을 대중국 포위 전략 속에 편입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 범위를 단순히 한국에 대한 방위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차원으로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객관적 정세나 우리의 주체적 조건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대중들한테 제기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차원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7월 29일 토론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 선생 : 주한미군사령관이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점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는지요?

박 실장 : 딱히 어떤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방위 범위를 남한 이외로 넓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 선생 : 유일하게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치고 싶어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 지역적인 제한을 바꿔 보려는 것이죠. 나머지는 미국이 손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전문에 UN 정신에 입각한다는 거 있고, 그리고 태평양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있고, 그리고 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조건 미국의 군사적 배치를 위해서 제공하고 미국이 수락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계속 있고 싶으니까 어느 것도 고칠 게 없어요.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정정하겠다고 그러면 마치 여태껏 한미방위조약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평을 했으니까 불편을 제거하는 쪽으로 바꾸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뭔가를 손대려고 할 때에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작전 지역 확대를 위해, 일본 군대와 남한 군대를 이끌고 둘을 결합시킨 채 실제 삼각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켜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 지역적인 하수 군대로 삼는 거죠. 결국 남한 군대를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여중생 문제나 SOFA 개정이니 하니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치겠다고 발언하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전혀 아니지요! 완전히, 더 완벽하게 미국의 아시아 전략 개념 속에 한반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할 때, 나도 물론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그 작전 지역이라는 게 태평양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언제나 끌려 다니게 마련이지만,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개념 속에 남한 군

대를 집어넣고 일체화시키려니까 그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어떤 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박 실장 : 거의 모든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조에 규정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주둔권과 무기나 병력의 일방적인 반입·배치에 대한 우리의 주권이 최소한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 관계랄까요.

리 선생 : 임대 관계라는 게 뭐죠?

박 실장 : 현행 4조에 의하면 주한미군 배치의 권리, 주둔의 권리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권리 행사의 주체가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의 허락을 받아서 주둔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3조를 보면 “어느 일방의 행정 지배 하에 있거나 또는 향후 합법적으로 행정적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영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양해사항을 보면 “미국에 의해서 결정된 영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만 미국은 방위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결정적인 훼손입니다.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맺어진 54년 한미합의의사록 1항을 보면 “한국은 국토 통일에 있어서 반드시 미국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통일에 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하는 이러한 부분도 개정되어야 하고요.

리 선생 :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느냐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한 휴전이 성립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성립을 방해하다 못해서 결국은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보호와 방위를 책임지는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체계화하는 조약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첫째로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이 조약을 체결하자고 했는가? 우리 인간 생활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쪽이 구걸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죽으니까 결혼하자고 했느냐에 따라서 결혼 후의 위상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그 당시에 비해서 이제 북한의 위협은 없어졌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군사적 역량도 없고, 그러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협력을 원하고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함으로써 북한의 국가적 변명과 안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방위조약을 구걸하다시피 요구할 때의 위기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해소되었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방위조약의 부분적인 변경에 대한 발상이 나오겠죠.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조약의 전면적인 폐기도 제기할 만한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한국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드는 거죠.

박 실장 : 저희도 폐기 입장하고 개정 입장으로 나뉘어서 논쟁도 벌였습니다.

리 선생 : 아, 그런가요?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과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조약, ‘특별한’이라는 뜻은 다른 조약들과는 다른 미국과 남한만의 조약이나 할 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미일안보조약, 과거 미대만방위조약, 미비방위조약, 그 밖에 지금 미국이 전세계 54개 국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요. 상당수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의 방위조약과 같은 무게를 지닌 조약 형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북대서양동맹은 우리와 같지요. 이런 식의 조약으로 미국이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한 25~26개 정도 되죠.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과거의 베트남, 미국과 남한 이런 조약의 문장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은 폐기가 아니라 부분적인 조항의 수정이라는 것이 어렵다 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필리핀이나 대만, 베트남은 아예 조약 자체를 없앴 거예요. 어느 국가하고도 수정한 일이 없어요. 1960년에 일본의 전 국민적인 폭동이 나다시피 한 소위

안보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아이젠하워 정권 때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주일미군이 파병, 군사작전을 위해 나가거나, 핵무기 적재함의 출입국 등을 조약 본문이 아니라 부속협정에 규정·규제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할 수 없다든가,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하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이 군사력을 다른 나라에 장기 주둔시킬 때는, 장기 주둔이라는 것은 북대서양동맹 국가나, 우리나라 일본처럼 이렇게 방위조약 형태로 주둔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데, 이것은 미국의 의회가 하나의 정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 조약하고 다른 조약하고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미일안보조약은 유효기한이 1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조약 기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미국이 볼 때 상대 국가의 위상에 따라서 조금 대접을 해준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속국에 속하는 조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흔히 한국 사람들은, 특히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소수의 개인들도 소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제한 소파가 방위조약과 별도로 개정될 수 있는 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한미군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지극히 지엽말단적인 손질은 조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 물질 취급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자동차 번호판을 다는 정도의 얘기는 이 협정의 본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방위조약을 이대로 놓고서는 소위 미군지위협정 즉 소파의 주요 내용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는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방위조약 체계와 법적 권리 의무 체계 속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완전 일체화돼서 들어앉아 있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여학생 탱크 압살 사건의 범인들을 처벌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이 군법회의에서 살인 미군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내보냈단 말예요. 이것은 언어도단인데, 소위 소파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무죄예요. 내가 무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법적 지위협정(한미소파) 상 주한미군이 미국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지휘관에 의해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행동할 때, 즉 군사훈련을 할 때, 이건 공무란 말이에요. 공무로 규정하거든요. 명령 계통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니까.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아시죠?

박 실장 : 공무 중 사건은 그 재판권이 미군에 있죠.

리 선생 : 물론이죠. 만약 그 사병이 명령이나 작전계획에 의하지 않고 탱크를 술 취해 가지고 혼자 몰고 나와서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그것은 법적 관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외 주둔 미군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미국 의회의 어떤 결의가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의거해서 방위조약도 체결되는 건데, 이겁니다.

첫째, 미국이 방위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국이 부담하는 피해나 의무는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 그리고 그 법적 해석은 항상 미군의 이익, 주장에 맞게 하는 것이죠. 여중생 사건처럼 미국 군대 장교나 사병은 그 주둔국이나 그 지역의 형사재판에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벌써 미국은 국제형사재판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군대만의 예외를 강력히 요구했고, 잘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다 격파해서 경제원조나 군사원조로 협박을 해서 지금 거의 50개 국가, 정확하게는 아마 45개 국가에서 다 받아냈어요. 45개 국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수가 45개입니다. 2차 대전 전에는 2개였어요. 즉 파나마하고 필리핀밖에 없었어요. 2차 대전 후에는 공

식적으로 주둔하는 건 12개 국가이고 지금은 40여 개 국가가 되었거든요.

둘째는, 미군이 장기 주둔할 때는 뭐 한 달이든가 일주일이든가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장기 주둔할 때는 우리 방위조약 4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어디에나 배치할 수 있고 병력 이동할 수 있고, 무기의 종류도 하여튼 배타적인 미국의 권한에 속하게끔 해요.

셋째, 해외 주둔 또는 파견되는 미국 군대의 경우 다국적 군대이건, 개별적 군대이건, 특히 다국적 군대의 경우이지만 나토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 경우도 그렇고 반드시 미국군 사령관, 장교가 지휘관이 돼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둔국의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도 없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요구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돼요. 우리가 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작전지휘권 내놔라 하면 미국은 나가요. 작전지휘권이 제일 큰 관건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방위조약 개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방위조약의 개정은 국가의 위상,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양식 자체의 변화 없이는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한다면 첫째, 우리가 예속 국가라는 아주 처절하고 뼈저린 자기 의식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속적 지위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거부하려면 미국이 우리에게 가할 보복이라든가 또는 불리한 조건 같은 것을 감내하고 참아 나갈 국민적인, 정권적인 아주 굳건한 결의가 있어야 해요. 그냥 말로만 대등하고 평등한 대미 관계와 소파 개정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응할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자기 관리 능력과 희생을 무릅쓸 그런 주체 의식이 있느냐, 이것부터 다짐해야 해요. 우리 민족으로서의 주체적 인격을 곳곳이 세워 배고픔을 참겠다, 이런 결의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대등한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반공주의자들도 그건 놀라거든요. 북한이 굶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전부터, 김일성 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저렇게 막 강한 힘을 발휘하는가? 북한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폐쇄적이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강대국의 군사기지와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련은 1963년 흐루시초프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원산과 청진, 두 해군항의 양도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거부했거든. 중국 군대도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5년 후인 1958년 11월 1일을 기해서 완전히 철수하거든요. 그건 중국의 표현도 있고 김일성의 민족자주의 표현도 있고, 또 북한 내의 정치권력 투쟁에서 소련과, 연안과 이런 것이 이제 불편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외세를 공식적·물리적으로 물리침으로써 강대국 세력을 등에 업고 나타날 세력을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처럼 강대국의 이빨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 소련과 중국의 군사기지와 군사 병력과 작전지휘권으로 하나가 된 예속적 군대 체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북한 군대가 강대국에 예속돼 있는 용병과 같은 군대라면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에 대해서 감히 반발할 수 있어요? 중국이 ‘뭘 뭘 양보해!’ 하면 그만이지. 소련이 김정일보고 ‘거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 곤란하니까 양보해!’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워싱턴에서 한국의 노 대통령에게 손가락 한 번 움직이면 움쩍 못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각성하고 얼마나 결의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필요 없도록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박 실장 : 앞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없애 자주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리 선생 : 미국이 남한에 군대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이 구실을 들어 주저앉지 못할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기 전인 2000년 5월 22일 남북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를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일이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3단계 평화구축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 5년간 경제·사회 문화교류를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 그렇게 5년간 계속하면 긴장이 낮아지고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며 미군 주둔의 허구성이 인식된다. 다음 5년간은 남북 간에 군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휴전선에서의 방위 역할을 주한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평화유지군)으로 교체하고 동시에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간 신뢰를 쌓은 다음 5년간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남북한에 평화 안정 정책이 정립되면 그때는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다음날, 바로 미국 국방장관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통일은 남북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정치적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가? 대통령께서 평양 가기 전에 미국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점잖게 한 말씀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나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통일은 말이나 구호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사 등 단체에서 국민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야 할 임무가 큼니다. 그래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상황과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자주·자립하는 주권 의식을 세우는 우리 국민의 각성과 결단,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 실장 : 몸도 편치 않으신데 두 차례에 걸쳐 장장 네 시간 가까운 대답에 응해 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대전제-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정구

1953년 미국은 북한·중국과는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정전협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한과는 이 정전협정을 위배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방위조약)을 협의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주권 포기과 다름없는 전형적 예속 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미국 또한 한국을 완전 예속시킴으로써 대공산권 봉쇄의 첨단 군사기지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방위조약은 군사주권 노예 상태의 주범이고 모태

이 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완전히 박탈한 채 인류 역사상 주권 국가의 군사주권을 이처럼 훼손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예속시켜 왔다. 또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외국군을 이 땅에 무려 58년 가까이 주둔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앞으로 최소한 50년 이상 머물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외국군 주둔이 100년을 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민족 공조 등이 논의만 되어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보고 논의 자체를 금기의 영역으로 몰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자발적 노예주의로서 미국에 더 예속되겠다는 노예 중의 노예를 자칭하는 꼴이다.

주권 포기를 강제하는 세부 조항

이러한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여 이 글은 먼저 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폐기의 긴요성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먼저 중요한 문제점부터 보기로 하자.

첫째, 정전협정의 위배다. 정전협정 13ㄷ항과 13ㄷ항을 보면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록 군사조약 체결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군사조약은 외부로부터 군인이나 신형 각종 첨단 무기를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배로 보아야 한다. 또한 4조 60항(“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특기할 것은 남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3개월도 못 되어 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발생 이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중국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예속 조약이다. 제2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이라는 구절과 “단독적으로나”의 조건은 행위 주체에서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또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치(무력행위를 포함하여)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제3조는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미국이 헌법상 절차만 지킨다면 선전포고나 무력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서 대한민국의 영토 어느 곳이든지 미국이 임의로 군사기지화, 군사 배치, 이동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한반도의 이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군사기지화하고 군사 배치도 할 수 있다.

셋째, 조약 기간의 무기한성이다. 조약의 무기한성을 규정한 6조는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주둔국들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넷째, 포괄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방위조약 전문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번 이라크 침략 전쟁 지원 파병 논의를 보더라도 일부 극우주의자는 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고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조약 정신에 의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주한미군의 재편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역할보다는 동북아 지역군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어 우리 땅이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와 같은 군사전략 기지로 전략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방위조약을 모태로 한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991년 한미전시지원협정(WHNS),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전형적으로 불평등하고 예측적인 협정을 양산해 왔다. 4조는 글자 그대로 미군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미국이 군사기지, 군 시설물, 훈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영토주권 행사를 제약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평택과 오산에 5백만 평과 이전비용 용산 50억 달러, 2사단 100억 달러까지 요구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에 할 말은 하고 호혜평등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후보자 노무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일년 군사비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미국에 자발적 노예의 길을 자청하는 반민족적인 대통령 노무현의 굴종적 모습만 남아 있다.

####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긴요성

방위조약 폐기의 긴요성을 논하기 전에 시대 상황부터 살펴보자. 지금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을 맞은 동시에 황야의 무법자와 같은 미국의 신파권주의만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북아시아에는 중·미 간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서서히 출범하고 있다. 민족 내부적으로는 남북간의 분단 적대 체제가 탈분단 체제로 이행하면서 평화통일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속냉전에서 전쟁까지로 비화될 수 있는 극(極)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첫째, 방위조약은 동서 냉전과 남북간 분단 적대 체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동서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간에는 탈분단 체제가 가시화되는 역사적 시점이다. 탈냉전과 탈분단 체제 하에서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동북아 신냉전과 남북간 재분단 체제 형성의 물적 토대가 되고 촉진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이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때문에 또다시 과거의 냉전과 분단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므로 응당 신냉전을 지연시키고 재분단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조약 폐기와 미군 철수는 긴요하다.

둘째,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한 침략 전쟁 획책 때문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탈냉전 기간 무려 여덟 번의 전쟁 위기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 가운데 미국이 계

획적으로 주도한 것이 여섯 번이고 남북의 우발적 충돌에 의한 것이 두 번으로 서해 교전이 다. 계획적인 전쟁 위기 여섯 번은 100% 미국에 의해 저질러져 한반도 전쟁 위기의 주범이 바로 미국임을 입증해 주었다. 한반도 전쟁 주범인 바로 그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둔다는 것은 전쟁 주범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기는 자살 행위나 다를없다.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러한 미국의 전쟁몰이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명권은 계속 위협받게 되어 우리 명대로 살기 힘들 것이다.

셋째, 지금 주한미군은 재배치와 재조정에 들어가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전력 증강으로 110억 달러를 미국이 투입하고, 참여정부는 자주 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군비 증액을 통해서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군을 완전히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작전권이 없는 우리의 대통령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사소한 장소 이전까지도 단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주권의 노예 상태인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재조정이 이루어지면 무려 100년 이상 이 땅에 외국군이 주둔하여 우리 민족사에 전례가 없는 외국군 주둔, 더 극단화된 군사주권 상실의 노예국이 될 것이다.

넷째, 조선조 말에 벌어진 청일전쟁의 21세기판이 이 땅에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조약 폐기와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6월 12일 한미관계협의회에서 아리고니 미 국방정보국(DIA) 동아시아국장은 주한미군 2사단을 “미국의 종합적인 국방 태세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해 “타격 부대로 매우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미국의 계획은 한반도의 방위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적·지구적 긴급 상황에서 한반도에 있는 부대를 원활하게 이동·배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4일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 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전진기지 체계(FOB)로 운영키로 했다. 6월 28일 발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발표문> 역시 “한미 동맹 관계를……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한국 내 변화를 반영하고, 범세계적 전력 구조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는 신(新)한미군사동맹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재강화의 일환인 주일미군-일본 자위대의 ‘유사법제 체제’와 미국의 ‘동북아 사령부’ 신설 구상과 직결되어 있는 듯하다. 21세기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 구상의 군사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철저하게 한국이 편입·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국의 여러 보고서가 예견하듯,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 때문에 이곳 남한 땅이 미국의 최전선이 되어 제2의 청일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다.

21세기 최대의 전쟁이 될 이 전쟁은 반드시 핵전쟁이 될 것이므로 한반도는 완전히 불모지대가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언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종말로 향할지 가늠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미국 푸들 정책을

민족 푸들 정책으로 강제로 전환시켜야

이같이 방위조약 폐기와 미군 철수의 긴요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현 안보 체제가 그야말로 자살 체제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귀한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평화번영협력체 속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는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탈미(脫米) 동북아 협력체를 형성하여 이 구도 속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력체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노 정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무현의 미국 푸들 정책을 민족 푸들 정책으로 강제로라도 전환시키는 일일 것이다.

최근 ‘자주국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자주국방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자주국방인가? 그 기준, 실현방법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방부가 말하는 ‘자주국방론’ 속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나 한미소과 개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한국군의 방위역할 증대”와 “동맹의 현대화”만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위역할 증대 과정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needs) 수준을 넘어서는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군비증강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주국방의 비용과 경제성 차원을 떠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의 문제로서, 우리 안보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및 연합방위체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4조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grant)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accept)”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병권(駐兵權)에 따라 미군은 사실상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 내 시설과 구역에 대해 무상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영토, 영해, 영공 등 전토기지 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상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둔권을 수용하고 있다.

또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어떠한 무기도 반입, 보유할 수 있는 형편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영토에 1957년 처음 핵을 반입하였고, 공식적으로 91년 철거한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역사상 7번이나 북한에 핵위협을 해왔으며, 1957년 한반도내 핵무기 도입 이후 1,500여명이 핵무기 관련 일에 종사하고 10여개의 핵부대를 운영한 바 있다.

일전에는 난데없이 미국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가 부대창설 이후 첫 훈련지로 한국을 선택하여 실전훈련을 감행한 바 있다. 그것은 한반도를 선제공격 전문 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의 최우선적인 투입지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네 보통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전통적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가 미국의 ‘수직적 병참기지’로 전락되는 징조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 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가 받는다”고 수정하여 ‘기지 대여의 성격’으로 바꾼 바 있다. 아울러 주일미군 배치의 중요한 변경, 장비의 변경,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발전하는 주일미군의 전투작전행동 등은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일본이 영토주권의 행사주체가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당분간 불가피하게 미군 주둔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미군주둔의 근거를 양국간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관계로 변화시킬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전적, 합리적 통제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나 열화우라늄탄과 같은 무기를 일방적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 1)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미군의 기지나 시설의 사용, 한국정부의 미군에 대한 인적 물질적인 용역 제공 행위는 양국간의 수평적인 계약 관계에 근거할 것,
- 2) 이런 계약에 의해 양국은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와 시설, 구역 등과 관련한 임대 협의 과정을 거칠 것,
- 3) 합의된 시설 및 구역의 사용과 한국내에서의 미군의 지위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규율되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 이동, 배치, 전투작전, 무기반입, 훈련, 증원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할 것 등이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상호합의에 의한 주둔’으로의 변화가 실제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한, 미군의 병력 및 무기체계의 반입·배치 등에 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작전통제권’은 한미합의의사록 2조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넘어갔다. 그에 따르면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 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국제연합군이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은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고, 주한유엔사는 단지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정전체제 관리로 그 역할이 변경되었음을 감안해볼 때, 형식논리상으로도 상당한 모순이다. 즉 이양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군사주권의 상징인 작전지휘권을 시급히 환수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현행 한미연합지휘체계가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는 표현 상으로는 ‘연합’이라고 하지만 한미 상호간의 균형적인 협조와 공통의 군사전략 개념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일방적’인 관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우선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측면에서 주한미군 전력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군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안보관련 정보의 노출로 대미협상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 군사·안보문제에 관한 한 북한측으로부터 책임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 한국군의 자주국방의 노력과 의지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점 등은 크나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환수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는 구조인 현행 한미연합사는 불가피하게 변화, 재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미연합사의 해체 혹은 재편 문제가 향후 주요한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위장성 출신인 조남풍은 자신의 논문(1998)에서, 현행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대안으로 ‘병립적 협조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원론적 수준이지만, 일단 참조해 볼만하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자 자국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필요한 방위협력 현안에 관해 상호협조를 한다는 구도이다. 위기 시나 전쟁시에는 NATO 가맹국들간의 방위기획위원회와 비슷한 가칭 ‘방위협력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수직적’ 한미군사동맹의 ‘전향적’인 역파에 있어서는 과거 일본사례와 그 한계점을 참고해 볼 수 있다. 51년의 미일안보조약(구조약)은 일본의 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극히 굴욕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일본국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그때부터 60년의 안보조약 개정까지 일본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으며, 특히 57년의 지라드사건은 수직적인 미일군사관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이를 계기로 미일소파의 불평등성이 많은 일본인들에게 인식되었고, 그 모범인 안보조약 자체도 개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구조약과 비교해볼 때, 신미일안보조약의 수직적 군사관계의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는, 다만 조약의 군사적 성격이 다소 희석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는 한, 또 일방적 연합방위체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이른바 ‘주도적 역할’은 실현되기 어렵다.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이 긴요한 지점이다. 미국의 ‘강제’ 아래 ‘동맹의 현대화’쪽으로만 편중되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사실 지난 대선 이전보다 더 후퇴한 느낌이다. 그때만 해도 최소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표라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하지 않았는가. 불길을 지필 새로운 동력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전략과 북한 핵위기

동국대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철기

정전 50년을 맞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전쟁의 길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한 국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패권주의적 야망에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 정책과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크게 방해받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감격과 환호는 옛일처럼 되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 ‘당당한 외교’나 ‘대등한 한미 관계’는 고사하고, 민족의 이익과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대미 굴욕 외교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추가적 조치’에 동의해 줌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해상봉쇄 그리고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비롯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 재배치와 110억 달러를 투입한 주한미군 증강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미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즈가 방한하여 한국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오만 방자한 압력을 넣고 돌아갔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28.3%나 대폭 증액된 22조 3,495억 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3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성과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간 느낌이다. 실패한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햇볕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대미 종속 관계가 심화되고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과 전쟁 위기가 감돌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보여지는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의 큰 변화는 핵무기의 선제 사용 전략을 공식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북한 위협론’은 바로 미국의 이런 선제 공격 전략에 더할 수 없는 좋은 명분이 되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 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은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냉전 시대 위협의 성격은 적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억지(deterrence)’를 미국에 요구해 왔지만,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에 따라 안보 환경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통적인 억지 개념은 미국의 적들에 대처하는 데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깡패 국가들’과 테러리스트

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 행동(act preemptively)'을 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의 중요한 명분 노릇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요한 선제 군사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이른바 '외과 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을 비롯한 선제 군사 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 채택과 더불어,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첫째,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동북아시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MD(미사일 방어) 계획은 북한의 억지력을 무력화하고 선제공격을 가능케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MD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MD 공동 연구와는 별도로, 이지스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함대공 미사일 SM-3와 패트리엇 PAC-3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MD 관련 무기 도입을 강요하여 사실상 한국의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MD망이 구축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억지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미국은 마음놓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전방에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 재배치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조치이고, 후방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대북 군사 공격이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 재배치가 실행될 경우, 미국이 보다 자유롭게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서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와 감축을 반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재편은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거나 원치 않더라도, 미국의 필요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2사단 재배치를 상당 기간 연기할 것같이 합의했음에도, 곧이어 개최된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 2차 회의에서 2사단의 후방 이동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별것도 아닌 것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에 반대 급부로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MD 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관련 장비 및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비롯해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부지 마련과 이전 비용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지하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벙크버스터 미니누크(핵벙크버스터)'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21일, 1994년 '미니누크' 연구개발 금지법안의 폐기안을 통과시켜 소형 핵무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이 지하 군사시설 파괴를 주목적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3분의 1 정도의 폭발력인 5KT 이하 성능의 '벙크버스터 미니누크' 개발에 착수할 경우, 특히 지하 기지가 많은 북한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 공격의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와는

상황이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와 이해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의 국내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라크전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르는 것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내년 11월 대통령선거 전까지는 북폭과 같은 군사적 행동은 자제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해상 검색 등의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MD 구축과 선제공격 전략에 명분을 실어 주는 ‘북한 위협론’을 당분간 유지해 가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 및 능력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에 대한 고정 관념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전쟁 억지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 땅을 잃어버렸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존재는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억지력을 파괴하는 ‘전쟁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과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선제공격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 채택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상실은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 공격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부시에게 코드를 맞추고 온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 평통사 재창립의 뜻을 올리며

지난 6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재창립 대회가 '전문화! 전국화! 대중화!'의 기치 아래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인천·부산·전북·대전충남 평통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지통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대중 조직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에 공동대표와 각 지역 대표, 그리고 회원들의 평통사 재창립에 대한 소감과 결의를 들어 봅니다. -편집자주

### | 평통사 재창립의 뜻을 올리며 |

#### \*\*평통사 재창립의 의의와 과제

공동대표 임종철

어느새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10년 전 '새로운 평화운동대중단체 준비위원회'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통합 논의가 시작되어 1994년 창립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전국에 지역 조직을 갖는 대중단체로 재창립한 것입니다. 1986년 김세진·이재호 열사가 “양키 용병 거부! 반전·반핵!”을 외치며 분신한 이래 반핵평화운동이 고양되어 '반핵평화운동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90년대 들어 여러 어려움으로 해산하게 되었을 때 이를 계승·발전시키자는 논의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로 결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욕을 가지고 출범한 '평통사'도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채 소수 선진 활동가 단체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 10년에 가까운 활동들이 누적되고 열성적인 실무 일꾼들의 노력으로 '평화군축운동'이 대중적인 의제이자 실천 과제로 떠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를 매월 개최하고, 각종 평화·통일 관련 사안들에 실천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던 것입니다.

특히 '공격용 헬리콥터 도입 저지 활동',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백지화 활동' 등은 평통사가 주요하게 이끌어 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꾸준한 실천 활동과 사안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실무 일꾼들의 철저한 임무 수행이 '미선이·효순이 압살 만행'을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확산시키고 광대한 촛불 시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평통사를 대중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통사가 재창립하면서 전국에 지역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시대적 부름에 호응하는 당연한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재창립을 계기로 홍근수·문규현 상임대표를 우리 운동의 지도자로 모시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내어 명실공히 탄탄한 대중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적으로 민주적 원칙을 잘 지키면서 동지애를 갖는 활동 자세를 가집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총역량을 확장시키는 신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나 혼자만

이 아니라 여럿의 생각, 우리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 민족의 뜻과 꿈을 아우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며, 동시에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온 민족과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 힘쓸 터**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서영석

지난 6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재창립 대회 이후, 보다 새롭고 참신하게 회지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울 평통사 소개부터 간략히 하겠습니다. 서울 평통사는 자주통일의 굳센 약속 ‘통일벚’ 회원들과 기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 그리고 서울 평통사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발을 다짐한 회원들과 함께 지난 5월 31일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창립 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조국의 현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현실을 던고 일어서기 위하여 수많은 고민과 실천, 투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각자 처한 조건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창립은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에 있고, 더욱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대중적인 단체로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주성 문제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해 낸다면 그것이 곧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을 자신들의 식민지, 전쟁 연습장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에 편승한 한중밖에 안 되는 사대 매국노들입니다. 현재 미국 자신의 군사 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미군 기지 재배치 문제는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부지나 이전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한미SOFA 규정마저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푼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주 국방을 뇌까리며 기만적인 논리로 국방 예산을 터무니없이 증액하려는 국방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주 국방은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 평화와 통일을 보장해 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니 국민 모두가 원하는 자주 국방의 모습일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해 내기 위한 싸움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서울 평통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 내겠습니다.

## **\*\*평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영광**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 윤인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든다. 약간 길어서 곤란한 때가 있지만, 내가 이 조직에 몸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다. 홍근수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존경하는 선배들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고,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쟁 책동이 노골화되는 때에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자체로 영광일 뿐이다.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어찌면 굴욕이 아닐까? 오만방자한 미국 부시 정부의 폭력 행사에 대하여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굴욕이요, 비겁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어떤 분은 스스로를 준비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전혀 준비 안 된 채 평통사에 참여했고, 한 지역의 대표 자리를 감히 맡아 버렸다. 이런 선택이 얼마만큼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되새김질하면서 살고 있다. 다행히도 인천 평통사는 창립 이후 회원과 후원 회원이 계속해서 늘고,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 회원들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결의도 높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느낌이다.

인천 평통사는 2006~2008년 사이에 반환하기로 결정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에 불법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데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아침 일찍 1인 시위를 하던 어느 날, 미군부대 내에 직장을 둔 한 사람이 나를 뵈며 바라보더니 “미친 놈들”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당황했다. 아침부터 미친 놈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그렇거니와 너무도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그 후 계속 내 머릿속엔 “미친놈”이라는 말이 왕왕거렸다. 억울한 심정이 울컥했지만 오랜만에 속 시원한 소리 들었다 생각하니 그리 화낼 일도 아니었다. ‘참으로 나는 이 일에 미친 놈이었나?’ 하는 자책감이 오히려 앞섰다.

평화를 지키는 일에, 통일을 이루는 일에 미쳤었나 자문자답했지만, 부끄럽게도 나의 삶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평화운동, 민족자주운동, 통일운동이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살아왔지만, 거기에 미쳐서 살아오지는 못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미친 놈”이라고 한 시민의 말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친 놈” 소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길 기도한다.

**\*\*평화와 통일의 길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신정길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줄여서 부천 평통사)은 ‘평통사’의 부천 지역 조직으로서 올 6월 1일 창립하였습니다. 부천 평통사는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흘리며 곳곳하게 살아온 ‘통일사랑노동자회’ 등 부천 지역 노동운동, 자주·평화·통일운동의 성과를 이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새 출발 한 것입니다.

1994년의 조·미 체네바 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김으로써 시작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지금 매우 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극우 세력의 행패는 그 끝 지점인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어떤 일보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모아 평화를 위협하는 호전 세력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군사주권을 거머쥔 채,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으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제멋대로 좌우하려 드는 미국과의 모든 불평등한 관계를 끝내고 호혜평등한 관계를 맺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반도에 전쟁의 불안이 가시고 평화가 넘치는 튼튼한 평화 체제가 자리잡도록 지혜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외세에 빌붙어 잇속을 챙기고 생명줄을 이어 가는 나라 안의 친미·친일 사대주의 세력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망동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0년대 평화운동의 맥을 이어 온 평통사의 물려서지 않는 투쟁 정신과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위의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부천 지역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융솟음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평통사 동지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천 지역에서 빛나는 모범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전북 평통사 공동대표 이세우

우리 민족은 외분단 이후 50여 년이 넘도록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라는 지극히 반평화적인 상태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한국에서 평화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 속에서 통일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을 대중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평통사는 단지 서울과 전북 두 곳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물론 두 지역이었다고 해서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적은 회원들이었지만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전개했습니다.

전북 평통사는 서울과 함께 1950년 미군 이리 폭격 사건 등 양민학살 진상규명운동, 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 대형 공격용 헬기, F-15K와 같은 무기도입 반대운동, 두 여중생 사건 진상규명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을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중들을 평화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대중 교양 사업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실로 평화운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대중과 더불어 더욱 힘있게 전개하는 데서 두 지역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대중적이고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요구하는 정세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번 재창립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인천·부천·대전·충남·대구·경북의 동지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평통사를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모범과 구심으

로서 세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재창립 대회를 계기로 다른 지역의 평통사 회원들과 더욱 힘있게 연대하여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를 비롯한 전북 평통사의 모든 회원들 또한 다른 지역의 모든 평통사 회원들을 한 식구로 생각하며 자주·평화·통일의 한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 **\*\*'생명 죽음'의 분단 현실을 뚫고 나가야**

대구경북 지통사 상임대표 정경호

분단된 지 58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지만 남북이 함께 열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신명나는 통일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통일적인 사회·경제·정치·군사·문화가 기세 등등하고 있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서로 물고 뜯고 서로 파멸되기를 바라는 '상극'의 마음들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우린 아직도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전쟁의 '생명 죽음'의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가해자인 우리는 아직도 베트남을 향해 사과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못한 채, 그 참혹한 전쟁에 대해서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비인간적이고도 비양식적인 '죄성'의 덩어리에 눌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마치 우리가 미국 사람인 양 미국의 논리로 북의 동포들을 악의 축이니 또는 파멸되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입에 침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북의 형제들을 더욱 불신하면서 엄청난 무기들을 사들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야말로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생명 죽음'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 죽음의 분단 현실을 꿰뚫고 나가고자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재창립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열싸안고 하나 되는 평화통일의 해방된 세상을 향해서 먼저 해원상생(解冤相生)적인 평화의 마음으로 군비를 축소해야 하고 그것으로 남북이 협력하고 손을 맞잡으면서 통일 세상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분단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서 열싸안은 해방의 날을 만들어 냄으로써 아시아의 평화를 향해서, 더 나아가 오늘날의 반평화적인 지구촌의 세계를 향해서 평화 봉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한 사명이 새롭게 힘을 모아 힘차게 행진하고자 하는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평통사 재창립에 대한 소회와 결의**

대전충남 평통사 창립 준비위원장 김홍수

나는 6·25 전쟁 중에 태어나 도처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에도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과 군사문화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젊은 날을 보냈다. 되돌아보니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그 후에는 예비군이 되어 총을 메고 훈련에 나섰다.

고등학교 때도, 예비군 훈련 때도 군사훈련 시간은 싫었다.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지루



한데다가 시간만 때우려는 교관이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생각은 해봤어도 전쟁이나 평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대학 시절 민주주의와 독재 타도 같은 말은 일상적으로 말하고 듣는 언어였으나 반전이나 군축, 평화 이야기는 강의실이나 거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20대의 세월을 보냈다.

내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눈뜬 것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던 때였다. 강의실을 드나들면서 게시판이나 대학의 동아리 모임에서 또는 교회에서 반전·반핵 학습을 알리는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반전·반핵 광고들이었다. 그 무렵 미국 교회와 신학대학에서는 반전·반핵 문제가 자주 토론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런 토론에 흥미를 느껴 사회윤리 교수가 담당하고 있던 ‘교회, 전쟁과 평화’라는 과목의 수업에 참가한 것이 바로 내가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그 뒤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와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재창립식에 참석하고, 또 대전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창립을 준비하니 평화와 전쟁 문제를 처음 생각해 보았던 옛 시간이 떠오른다. 대전과 충남의 동지들도 오는 9월에 대전충남 평통사를 창립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결의를 다짐하려고 한다.

평통사 홍보대사 안치환 인터뷰  
평통사와 국민 대중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통사 회원들과 독자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갈라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열어 가고 계신 평통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대사 안치환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통사 홍보대사를 맡게 되셨습니까?

그동안 저는 그냥 노래를 통해서 통일, 평화, 또는 자유, 인간에 대한 노래들을 해왔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발언의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 전쟁, 더 정확히 말하면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은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겠구나 생각되어서요.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살상 무기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땅에서 가슴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양심이 있고, 정의를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평화의 길에, 통일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평통사의 홍보대사를 맡게 된 이유입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평통사를 알려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열어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통사 제창립 대회에 참석하시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생각보다 작은 장소였지만 평통사 회원님들의 열렬한 의지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훗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시청 앞에서 열린 두 여중생 추모대회에서 ‘아메리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일반 대중들에게 미화된 미국의 이미지를 넘어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들의 이면의 얼굴을 벗겨 내고 싶었습니다. ‘아메리카’가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노래이길 바랍니다.

평통사는 올 하반기 국방비 삭감과 무기 도입 저지를 주요 활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통사의 활동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는 물론 필요한 것이겠지만, 왜 미국산을 주로 도입해야 하는지? 그래야만 하는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대중적으로 고발해 나가고, 이것이 곧 자주적 국가의 위상을 세워 나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통사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꾼으로서, 평통사 홍보대사로서 힘 닿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공동길 | 사진·참꽃스튜디오

※ 안치환 홍보대사는 지난 7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축제3’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에 평통사 회원들을 초대해 준 안치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평화운동단체를 찾아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찾아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간사 권상훈

\*\*‘평화군축센터’는 언제,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평화군축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올해 5월 22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작년 4월경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준비 모임을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작년의 여중생 투쟁과 촛불 시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질의 활동, 그리고 올해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까지 중요한 문제들이 급박하게 제기되다 보니 발족하기 전부터 가칭 형태로 실질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가 평화군축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정세적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참여연대의 활동 전망에 대한 고민 속에서입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던진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었을 때 시민사회는 그보다 앞선 문제들을 제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좀 더 진보적인 문제들이 되겠지요. 참여연대의 경우도 저희가 던졌던 큰 문제들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상당히 제도화되었습니다.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제화되면서 참여연대는 좀 더 진보적인 문제들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다 진보적인 문제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시급하게 다가왔고, 이것을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로 정전 50주년을 맞이하고 한반도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데 반해, 시민사회는 점점 양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에서 대표적인 게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른 권력기관에 비한 여전히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방 영역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성역을 감시하는 활동들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몇 가지가 결합해서 평화군축센터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현재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발족하자마자 너무 현안에만 대응하다가 지금은 저희를 추스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기초를 잡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국방 영역에 대한 감시 활동, 마지막은 이러한 평화운동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대 활동은 제의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나 국방 영역 문제들에 대해 참여연대의 입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참여연대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쉽게 답변하기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 ‘동북아 평화 문제’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미 관계에 대한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참여연대의 활동을 잡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평화국민협회를 통해 참여연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방비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 단체들과 같이 국감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비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안하는 지점은 이게 원래의 문제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원래 GDP 대비 4%대까지 인상을 검토 하라고 했는데, 어제(7월 8일)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3.7% 정도까지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3.5%까진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국방비 증액 문제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여연대가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인데, 이 문제와 국방 구조개혁 문제를 연관해서 제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반박 논리를 시민단체들이 계속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운동 정도와 반박 수준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비 증액 문제가 ‘자주 국방’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되면서 국민적 합의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국방 하려면 당연히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명분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 방식도 일정하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사회복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좀 더 핵심적으로는 주한미군 문제나 그 배치 문제와 연관해서 국방 구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 문제를 그렇게 쉽게 끄집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방 구조개혁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이템을 잡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 예산과 관련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실행위원 체제로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파 실행위원 구조로 운영되는데, 저희 실행위원 중에 국방 문제를 얘기해 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실 분과 연구할 분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스크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회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회원 체계여야 되는데……(웃음) 참여연대의 기본 원칙이 독립채산제거든요. 부서별로요. 그

러니까 참여연대 회원에 가입해서 자기가 평화군축센터를 후원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7은 부서로 가고 3은 사무국으로 가는 시스템에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신생 부서들은 여건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을 보여 주며) 이 리플렛을 가지고 지금 회원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요. 지금 사무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은 빌려 쓴다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 빨리 회원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활동은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에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실행위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실행위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함을 못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운동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다른 부서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세 영역의 실행위원들도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실행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이밖에 자문위원 체계도 있습니다. 물어 봐야 될 내용 같은 것들은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실행위원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열 분 정도 됩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어떤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실무진이 있는데, 실무간사는 박지영 간사랑 저랑 두 명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실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결함하셔서 실무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있고, 실행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화군축센터의 기본 입장은 실행위원 체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연대 문제는 참여연대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상집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와 상집에서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평화군축센터 입장은 실행위원 회의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화군축센터'의 자랑거리와 어려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웃음). 자랑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내부에 있다 보니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저희도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국방하고 북핵 문제 쪽을 맡고 있는데, 그쪽의 비밀주의에 문제가 있고, 전문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인력풀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뭐 자료를 요청해도 “이것은 비밀이다” 하면 전혀 받아 볼 수 없고, 또 자료를 봐도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적 비밀주의를 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자료들은 보통 의원들

을 통해서 반깁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봤더니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 분야의 비밀주의적 요소라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인력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평화군축센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부분들에서 그냥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연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영역 감시하는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연대와 시민 교육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다져 나갈 것 같습니다.

**\*\*평화군축운동 외에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참여연대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군축센터가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 안에서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그 안에서 남북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할 것이거든요. 저희가 해야죠.

**\*\*‘평통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리고 평통사 회원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평통사가 새로 재창립하면서 평화군축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여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국방 영역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평통사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질의서도 보내고 기초 자료를 사이트에 많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또 국방 영역 관련 자료를 상당히 많이 복사해 놓았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쪽 부분 활동을 오래 하신 거잖아요, 다른 쪽에 비하면. 원래부터 활동을 해오셨으니만큼 저희와 앞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자료와 의견, 정보들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분들한테는 다 느끼시겠지만 한반도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MBC를 보니까 리처드 필인가요? 그 사람이 “최소한 아침에 일어났는데 김정일이 웃는다는 신문을 보기는 앞으로 당분간 힘들 것 같다”는 얘길 하더군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저희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사회가 평화에 대한 분명한 기조와 원칙들을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외관계들 속에서 선택해야 될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밝혀 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김은아)